

해외출장 결과보고

I. 참석 회의명

OECD 글로벌 농업포럼 및 제163차 OECD 농업위원회

II. 개최일시 및 장소 : 2014.12.2.(화)~4(목), 파리 OECD 본부

III. 참석자 : 송주호

- 한국대표단 : 농림축산식품부 김경미 과장, 정세정 사무관, 농림수산 식품교육문화정보원 김기주 팀장, 고선욱 주임, OECD 대표부 송남근 과장

IV. 핵심요지 :

- 개도국의 부상은 농업무역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시장왜곡 효과를 가져오는 관리가격 구매에 의한 공공비축제도는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OECD는 WTO와 협력하여 각국에 정책 권고를 제안하여야 할 것임.
- 지속가능성과 농업생산성의 달성 위한 방안 모색. 콜롬비아 농업정책분석 및 2016년 OECD 농업장관회의 준비가 주로 논의됨

V. 관찰 및 평가

- 국내 농업정책 수립·시행 시 OECD 농업무역공동작업반, 글로벌 농업포럼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왜곡 효과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
- 허용보조금, 개도국 예외조항 등과 관련하여 WTO의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Rev 개정시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 우리나라 공공비축 제도는 시장가격을 기초로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는 바 이를 사전에 공유하여 대비할 필요 있음.
- 우리농업에서도 지속가능성과 농업생산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 OECD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분석·검토하고 호주, 캐나다의 사례의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 OECD 농업장관회의의 준비와 관련하여, 한국 농정에 유용한 쟁점을 발

굴하여 적극적으로 준비작업에 참여하여 대응할 필요 있음.

- 농업혁신작업과 농가단위의 생산성 증대 작업과 관련하여, OECD 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참고하여 우리 농가의 생산성 분석 및 혁신을 위한 요소를 밝혀내는 것이 필요할 것임.

VI. 상세내용

가. 글로벌 포럼

1. 정책과 시장 환경 분석 (Session 1)

- 환영사(Mari Kiviniemi, OECD 사무처장) :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OECD 전문가의 정책권고를 도출해나가는 다자적 협력체로서 OECD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WTO로의 논의 확대 기대.
- 발표 1 (Jonathan Brooks, OECD ATM 과장) : 중국, 인도 등 개도국(emerging economies)의 경제성장에 따른 농업시장의 수요·공급 변화로 수입·수출국의 구성이 변화하는 등 농업시장의 구조 변화가 있었음. 한편 1986년부터 2013년까지의 PSE 구성부분 중 생산량기반 지지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AMIS(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 참가국의 경우 수출세, 수출쿼터, 수출금지(밀, 쌀, 옥수수, 대두)를 부과하는 국가는 35개국('11년)으로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준임. OECD 회원국의 경우 농업부문의 구조개혁을 하였으나, 모멘텀은 약화되고 있으며, 개도국의 경우 자국 시장보호를 위하여 국제시장을 왜곡시키고 있음. 선진국·개도국 모두 식량가의 상승과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 AMIS: G20 농업장관 요청에 따라 2011년에 설립되어 식량시장의 투명성과 정책조화

2. 공공비축제도의 무역 정책적 분석 (Session 2)

- 발표 2 (Stefan Tangermann, Gottingen University) : 2007년 세계 곡물가격 상승, 국제 PSE에서 7개 개도국* 비중 증가(17%('02-07년 평균) → 45%('12)), PSE에서 왜곡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현상을 설명. OECD에서 디커플링(decoupling)은 상대적인 개념이나, 시장왜곡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7개 개도국 :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남아공, 우크라이나

- 한편, 시장접근(market access)의 경우 관세율 인하와 TRQ(저율관세할

당)의 증가는 수출보조가 증가한 낙농업을 제외하면 시장 효과가 적었음. 이는 관세율 인하에 따라 오버행(overhang)*은 감소였으나 그럼에도 실행관세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임.

- * 오버행(overhang) : 양허관세율(bound tariff rate)과 실행관세율(applied tariff rate) 차이
 - 수출 파이낸싱, 수출국영무역기업(STEs), 식량원조의 경우 OECD에서 혁신적 분석방법론을 개발하였으나, 정치적으로 민감하여 중단된 바 있고, 수출제한의 경우 최소한도의 계량분석결과만 나온 상황으로, 아직 완결된 결과는 없음.
 - 최적화된 정책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고, 디커플링, 정책대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또한 동물복지나 식량안보와 같은 사회적 요소는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재해위험과 제도디자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지역개발, 빈곤감소, 식량안보 목적의 가격지지와 투입재 보조는 생산성을 낮출 수 있음.
 - 식량안보를 개선시키기 위한 최선의 정책이 무엇인지, 수출제한정책의 대안, 바이오연료 지지와 같이 가격을 인상시키는 정책, 가격수준과 무관한 정책, 정책변혁 측면에서 직접지불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발표 3 (Lars Brink, Expert Advisor) : 도하 세부원칙(Doha Draft Modality Rev4.0, 이하 'Rev')의 수출경쟁은 보조, 재정보조, 수출국영무역기업, 식량원조, 국내보조(AMS, 블루박스, 무역왜곡지지)로 구성됨. 수출보조의 경우 확약(commit)했으나 최근 사용한 회원국은 EU,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 멕시코, 미국이고, 확약(commit)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회원국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일본, 남아공임. 대부분의 회원국은 확약하지 않고 있는 상황. 수출보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합의보다 수출보조를 소량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합의가 각국에게 재량을 준다는 점에서 타결 가능성이 높음.
- 수출재정보조의 경우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이나 보험이 포함되며, Rev에는 최대 반환기간과 자기금융(self-financing)이 규정되어 있는 바, 미국의 프로그램의 경우 Rev 요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수출국영무역기업(STEs)의 경우 Rev에는 개도국에서의 수출 독점은 없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STEs는 6개국이 있으며, 그 중 4개만

- 수출하고 있음(캐나다의 CWB, 중국의 쌀, 옥수수, 면화, 담배, 수입 쌀·옥수수).
- 식량 원조의 경우 필요성이 충족되고 시장개발과 관련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현재는 Rev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시행되고 있는바, 현금, 현물보조 또는 둘의 혼합 방식으로 행하여짐. 긴급한 경우 또는 World Food Programme(WFP)의 일환으로, fully grant form 또는 국가(중국, 일본, 미국)에 따라 현금화를 허용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국내보조의 경우 양허 총 감축대상보조(bound total AMS)의 경우 17개 선진국, 15개 개도국 등 32개국이 부담하고 있음. Rev에서의 국내보조는 블루박스 기준이 더 완화된 결과 개도국에 유리하다고 평가됨. 한편 최종 양허 무역왜곡보조총액*(Overall trade Distorting Support, 'OTDS')의 경우 중국이 95.2, EU는 31.3 (USD Billion)임.
- * 무역왜곡보조총액 : 감축대상보조 + 블루박스 + 최소허용보조
- 한편,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minimis), 양허 총 감축대상보조의 경우 관리가격(administered price)는 제거·감소되어야 하는바, AMS의 경우 2.5~5%로 나타났음.
 - 미국의 2015년 품목별 정책은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보임. 미국의 경우 새로운 지불제가 블루박스로 분류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어 circuit breaker가 필요할 수 있음. 노르웨이의 경우 WTO의 무역정책리뷰(TPR)에 따라 몇 개의 잠재적 문제가, 인도의 경우 무역 왜곡지지의 정의가 문제될 소지가 있음. 인도는 2010년 투입재 보조를 대규모로 단행했는바, 시장왜곡조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음.
 - 국내 지지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관리가격에 의하여 취득, 방출되는 공공비축이며 이는 통상 AMS에서 그린박스로서 제외되고 있음.
- 발표 4 (David Laborde, 선임연구원, IFPRI) : 농업시장에서 개도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바, 개도국의 경우 LDS, 감축폭, 신축성, RTA 등 여러 예외를 인정받고 있음. 신축성의 경우 특별품목이나 민감품목 등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통상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짐. 실증분석을 통하여 DDA 이후 각국간 관세율 인하자료 등 제시함. 오버행을 축소하는 등 각국간의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며, 이는 정책적 제약조건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균형적으로 고려할 때

달성할 수 있음.

3. 무역과 관련된 국내정책과 식량안보 (Session 3)

- 발표 5 (Annelies Deuss, OECD) : 2007-08년 곡물가 상승에 따라 안정적인 식량공급에 대한 위기감 제기, 가격변동성 감소와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비축제도가 주된 의제로 등장. 공공비축제도는 완충 비축(buffer stocks, 가격 안정 목적, 생산자들을 가격 하락으로부터 보호 또는 소비자를 가격 상승으로부터 보호), 사회적 안정망 비축(규칙적인 식량 분배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며, 빈곤층·만성적 식량불안정 보호), 긴급 비축(자연재해와 같은 긴급 상황으로부터 보호)으로 구분됨. 완충 비축은 가격을 안정시키거나 가격 수준을 변경시킴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함. 사회적 안정망 비축은 보조된 가격으로 식량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함. 이들을 구별하기는 어렵고, 다른 국내 정책으로부터 비축 정책을 분리시키는 것도 불가능함.
- 다양하고 상충되는 목표가 있고, 프로그램 디자인·작동 결정요인들(재원 조달방안, 조달 규칙, 비축 구성, 비축 장소 등), 물질적·재정적 제한이 존재(재고장소 부족, 대규모 비축량의 문제 등). 비축분 방출 상태를 유지할 수도 없음(방출 시 고갈됨)
- 완충 비축과 사회안전망 비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분배적 영향(비효율적인 타겟팅은 불균형 증가, 특히 완충 비축의 경우 생산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결국 상대방에게 손실을 전가시켜 하나의 목표만 달성하게 되는 결과), 재정적 영향이 존재(직접 비용과 기회비용; 재원을 덜 투입하는 것은 가격 리스크를 감소시키는데 더 효율적일 수 있음)
- 다른 요인으로는 민간부문으로 전가시키는 문제(예측하기 어려운 취득·방출시점 등), 의도적이지 않은 국제적 차원의 부정적 효과가 있음(대규모 곡물의 취득과 방출은 국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특히 완충 비축의 경우, 수입 관세와 수출제약은 완충 비축의 작동을 개선시키는 반면, 무역의 상대방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
- 발표 6 (Jamie Morrison, FAO) : 무역 협정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측정하기 어려움. 다만, 식량안보를 위한 정책 영향은 가격에

대한 직접적 영향, 농업 분야 대응에의 간접적인 영향 등을 통하여 지표로서 측정 가능할 것임. 국제 시장에서의 영향은 예컨대 생산국에서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나 국제 시장에서 잉여량(surplus)의 크기, 시장 특성 등 요소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됨. 또한 각국의 무역 위상, 국제 시장 조건의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됨.

- 농업 변혁의 단계를 구분하면 기초를 설립하는 투자단계로서 1단계(정부개입 실패, 시장자유화 실패)가 있고, 이는 도로, 관개 시스템, 리서치, 보급활동, 토지 변형 등이 그 구성요소임. 2단계(정부 개입 성공, 자유화 실패)에는 보조금 요소 투입이 있으며, 3단계는 정부 철수임(효율적 민간 시장이 되는 것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실패하고, 자유화가 성공하는 경우를 의미함)
 - 결국 농업의 발전단계에 따라 집약적, 생산성이 낮은 농업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집약적 기술의 농업(효율적인 투입재 수요, 생산잉여 달성)으로, 그 다음으로 재원과 투입 수요 증가와 공급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임. 투입재 보조의 경우 2단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단, 정치적 다변화, 타겟팅 실패, 지대 추구(rent seeking), 비효율적인 관리, 시장 왜곡 등 위험요소를 고려할 필요 있음. 시기, 예측가능성, 투명성, 조달 메커니즘의 효율성, 공공비축 조달 판매 시장의 구조와 기능 등의 요소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한편, 녹색혁명 초기 단계에서의 이익은 성공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한 정책권고로 이어질 수 있음.
- 발표 7 (Jared Greenville, OECD): 1973-97년까지 실질식품가격은 하락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증가하는 추세. 총 상품 수입비용 중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순 식량무역(net food trade)에서 수입국/수출국 지위 개선 정도를 계산한 결과, 대부분 개선되어 식량안보는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식량안보에 대한 향후 도전과제는 인구구조학적 변화와 富(prosperity)의 요소로서 수요 증가, 상대적 수요의 변화, 농업에서의 생산성과 기술 진화를, 기후변화 요소로서 생산 패턴의 변경, 불확실성의 증가를 들 수 있음. 이에 따라 무역에서 식량안보가 가지는 중요성은 장기적 관점에서 더 커질 것이며, 빈번한 기후변화, 비교우위의 변화, 수요증가와 富의 증진 등 요소가 영향을 미칠 것임. 지역적·국제적 시장에서의 무역 증가는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이는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다만

수출제한, 세금, 보조금과 같은 손실, 사회적 안전망·대안의 부재는 리스크 요소가 될 수 있음.

- 발표 8 (Ulla Kask, WTO) : 식량안보는 접근성, 가용성, 활용성, 안정성을 의미하는바, 자급률과는 다른 개념임. 어느 국가의 식량안보를 위하여 다른 국가의 식량안보를 위협하여서는 안됨. 무역개방은 효율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 AoA에서는 시장 왜곡효과가 없고 예측 가능한 국제시장을 이룩하고자 하며, 식량안보의 경우 각국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음. 아래는 AoA의 주요 내용임.
 - 전문 : 식량안보를 고려할 것이 명시됨
 - 시장접근: 양허관세율, 실행관세율, TRQ, 특별세이프가드
 - 수출경쟁: 수출보조금, 수출보조금(수량), 금지
 - 국내지지: 허용보조금(그린박스), 블루박스, 앰버박스
 - 무역은 식량안보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조건이며, WTO는 일정 재량을 허용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다른 회원국 비용으로 식량안보를 달성해서는 안됨. 많은 개도국이 비관세장벽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많은 변화들이 예상됨.

4. 시장개방에서의 우선적인 목적 달성과 향후 계획 (Session 4,5)

- 발표 9 (Ken Ash, OECD) : 농업시장은 현재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부문이지만 개방하면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음. 정부는 농민을 돕기 위해 무역정책이 아닌 인프라 구축, 교육제공, 식량시스템, 식품안전 등 국내정책에 신경써야 하며, 이는 허용보조금 항목에 포함. 농민이나 비즈니스에서의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하고 국제 규제를 협력하는 것은 중요. 무역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지만, 무역보호도 해결책이 될 수 없음. 국가차원을 넘어 세계 차원의 식량안보도 중요함. 공공비축과 관련하여 목적과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사회·정치·환경 요소를 고려할 때 공공비축만이 해결책은 아닐 수 있음. 콜롬비아의 의견대로 비용 부담의 문제가 남으며, 기회비용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고, OECD는 정보를 생성하고, 정책권고를 만들어 정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임.

나. 농업위원회

1. G20 활동 보고

- (호주) 2014년도 G20 의장국으로서 G20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경제성장, 개도국과 부의 재조정, 투자와 인프라, 고용·노동 가동성이라는 주제로 무역의 규제완화, 보호주의 배격을 선언함. 식량안보·영양을 포괄하기로 하였고, 식량이니셔티브, AMIS 강화, 지속가능한 생산성 증대를 주요하게 논의함.
- (터키) 2015년 G20 의장국으로, 저소득국가 개발과 중소기업이 세계 경제에 통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개발,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

2. 지속가능한 생산성 증가를 위한 주요 정책 요인: 농업혁신시스템, 자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 농가단위구조개혁

- (생산성 증가를 위한 농업혁신시스템, Frank Van Tongeren, OECD) 농업생산성·지속성을 위한 틀은 정책 영역(거시경제요인·거버넌스, 규제·무역투자·금융·세금, 인프라·고용·교육, 농업 혁신), 인센티브 영역(경제안정·신뢰, 투자위한 시장인센티브, 역량강화, 타겟팅된 인센티브), 성장 요인(혁신 - 구조변화 - 자연자원) 및 그 결과로서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으로 진행됨. 호주, 캐나다, 브라질을 시범국가로 분석하였음.
 - (호주) 호주의 농업부문 국제경쟁력은 매우 높으며 신기술 도입비율이 높음.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위 분석틀은 유용함.
 - (캐나다) 캐나다에서의 농업정책에서 혁신은 매우 중요하며, 위 혁신틀은 국내정책프로그램을 운용하는데 인프라, 세금 등 농업외 부문의 종합적 분석을 가능하게 함.
 - (사무국) 독일의 지속가능성 개념 질의에 관하여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답변.
 - (일본) 일본은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중시하며, 베트남, 미얀마에서 식량가치사슬 강화 노력.
 - (영국) 영국에서는 농촌지도활동(extension)이 중요한바, 교육·연구 범위가 넓어 이를 하나로 아우르는 작업이 어려울 수 있음. 농민 스스로 혁신을 도입하게 하기 위한 구조적 유인이 필요한바 영국 가금류 부문은 낮은 지지와 높은 경쟁 때문에 신기술 수용이 빠른 편임.

- (미국) 거시경제요인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함. 한편, 호주의 생산성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농가수준의 분석을 통하여 생산성 요소를 밝혀낼 수 있음.
- (뉴질랜드) 정보 확산을 위해서는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EU)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평생교육이 중요함. 유럽국가 농민들이 다른 국가 농촌으로 휴가를 가는 현상을 반영한 농촌지도활동이 효율적일 것임.
-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위 틀에 의거한 분석작업을 OECD와 시작하였는바, 골든 트라이앵글(지식, 관행, 정책 연계)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 커뮤니케이션과 PPP 중요.
- (핀란드) 농민이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을 농촌지도와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효과적임. 혁신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바, 실용성을 감안해야 함.
- (독일) 독일은 농민의 교육수준이 높고 농촌지도·자문기관 사이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거버넌스가 중요하며, 혁신의 수용은 광범위하게 검토되어야 함.
- (에스토니아) OECD와의 농가수준분석(farm level analysis)을 통하여 낙농부문에서의 생산성 저하 요소를 밝혀내서 유용하였음. 최근 유기농 부문의 생산성향상 정체 현상은 지속가능성 요소가 생산성을 단기적으로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
- (한국) 혁신은 농업정책에서 매우 중요함. 한국은 민간 부문의 경험을 공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생산성·지속가능성 성과가 우수한 농민 150여명을 선별, 다른 농민과 기술 공유하도록 함. 또한 네덜란드와 같은 해외선진농업기술을 전수받는 것도 중요한바, 이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도 필요.
- (호주) 다른 부처와의 협력과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작업은 힘들었으나, 결과적으로 농업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 농촌지도활동은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사무국) 농업은 기술·지식집약적 부문으로 농촌지도·연구·교육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정부의 신뢰도도 중요한바, 정부가 혁신기술의 안정성을 승인하면 민간은 이를 신뢰하여 도입할 수 있게 됨. 초기단계부터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도 중요함. 농가수준의 분석과 국제협력도 중요함.

- (지속가능한 생산성 성장을 위한 자연자원정책, Frank Jesus, OECD) 농업부문은 수자원, 토양, 온실가스, 암모니아 배출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바, 농업생산성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커플링, 현행방식의 생산성 활동의 지속여부, 자연자원 제약, 기후변화 등의 도전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음. OECD는 벤치마킹과 공통적인 분석틀 개발, 환경지표 개발, 녹색성장 위한 자문서비스 개발 및 평가 활동을 하고 있음.
- (프랑스) 현행 유럽의 표준화된 농업모델은 한계에 직면하였으며, 생산성 증진과 자연보존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함.
- (영국) 생물다양성, 수자원 뿐 아니라 생태계시스템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연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부 및 기타부문의 역할도 중요함. 농민들의 자발적 수용을 위한 리스크, 동기유인 등이 필요.
- (일본) 농업의 외부효과로 인하여 중앙·지방정부가 수자원 관리 노력하고 있음.
- (콜롬비아) 생물다양성 등 환경적 요인을 결부한 생산성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는 것은 정보집약적이고 농민의 기술수준이 높아야 더욱 효과적일 것이나, 생산성과 환경보존을 전부 목표로 설정해야 함.
- (미국)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위한 유인을 분석하고 있음.
-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폐수의 90%를 농업부문을 포함하여 재활용하는 등 하향식 방식으로 관리. 상향식 방식으로 접근하는 다른 부문의 경우 농민의 참여가 있어 성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함.
- (EU) 해양부문의 경우 주체적으로 행위하는 자는 생태계시스템과 수익에 대한 전문가인 어부임. 농업부문에 이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네덜란드) 자연자원제약은 위협이 아니라 도전과제이고, 이를 통하여 상향식 접근이 가능할 것. 정부는 민간부문과 농민의 투자를 장기적 정책을 통하여 유도해야 함.
- (독일) 독일은 가금류, 돼지의 경우 집약적 방식으로 이루어짐. 증거에 기반한 분석이 필요하며, 해양뿐 아니라 산림부문 참고 가능.
- (러시아) 최근 관개시설 구축하고 개간지를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하고자 함. 토양의 질 관리가 매우 중요함.
- (농가 구조조정을 위한 규제환경, Frank Van Tongeren, OECD) 다수의

소농과 소규모의 상업농이 존재하는바, 소농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함. OECD에서는 영국, 에스토니아, 네덜란드를 분석함. 영국에서는 총요소생산성(TFP)이 안정적이었고 네덜란드의 경우 TFP는 투입재 감소와 산출물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함(2008년 이후 산출물이 투입재보다 빠르게 성장하며 생산성이 증가하였음). 에스토니아는 소수의 대농이 TFP의 요인이었음. 농가 사이의 자원배분이 주된 요인으로, 자원배분이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생산성이 높은 농가로 이동하였음. 쿼터 완화는 구조변화와 혁신을 강화하여 수익성을 향상시켰고, 쿼터의 구속력이 없는 경우 수익성 높고 혁신적인 농가의 증가를 가져왔음.

- (인도의 농업현황 발표) 1950년대 인도는 식량순수입국가로서 식량안보가 우선순위에 있었음(제1차 계획, 1951-56년). 제1차 계획에서 토지는 기계화비율이 낮고 생산성이 저조, 경직되어 있어 임대와 원할하지 못했음. 한편 농업에서의 상업자본의 역할이 미미하였으며, 민간부문의 역할이 제한적이었고, 식량무역을 대외적으로 통제하였음. 그러나 녹색혁명·기술추진으로 생태계적 접근을 통하여 연구개발과 관개시설 증가, 경지정리, 투입재보조의 증가, 리스크완화정책 등이 추진되어 1990년 중반 곡물의 자급을 성취, 그 이후로 식량 순수출국이 됨.
 - 인도는 높은 성장률을 높이고 있으며, 농업부문의 상업화가 가속되고 있음. 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쌀, 쇠고기, 면화, 우유, 포도 등에서 가치사슬(Value Chain) 이룸. 식품표준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민간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인도는 채식주의자가 75% 이상, 육류생산 위한 곡물류 수요 낮음.
 - 생태적인 지속가능성, 사회적 포용, 국제경쟁력 강화가 농업정책의 중점 영역임.
 - (미국) 상황별로 각기 다른 방안이 필요하며, 유연하고 적용가능한 규제가 요구됨. 농촌개발을 통하여 도시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인바, 2015년 5월 USDA에서 농촌개발 컨퍼런스 개최 예정.
 - (일본) 2013년 농업부문의 개혁 단행함. 경지정리, 인프라 건설, 토지임차제도 개선 등을 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일반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허용함.
 - (영국) 기술변화에 따라 농업부문의 최적화 정책은 변화 가능함. 프랑스와인산업은 철도기술의 발전에 따라 남쪽으로 이동됨. 인구학적 측

- 면의 고려도 필요한바, 젊은 농업인의 생산성이 우수함.
- (핀란드) 농가의 인구구조와 관계있음.
- (콜롬비아) 농업 조합의 역할에 대하여 언급함.
- (호주) 유연적인 정책환경이 필요함.
- (노르웨이) 농지규모가 적음에도 노르웨이의 생산성은 높은바, 규모와 생산성의 단순 비교는 무리.
- (아일랜드) 농지정리 및 토지임대를 쉽게 하는 정책이 필요.

3. 콜롬비아의 농업정책 리뷰(비공개 세션)

- (사무국) 콜롬비아 OECD 가입절차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농업정책을 분석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관) 인구 47백만, 남미에서 브라질, 멕시코 다음으로 큰 면적. 농업은 GDP의 6%, 고용은 17.5% 차지. 농지면적은 4.4백만ha로서, 생물 다양성과 자연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음. 농업 순수출국으로 주요수출 품목은 화훼, 커피, 바나나, 설탕. 농업성장률은 내부분쟁 등으로 25년간 1.6%대. 빈곤율은 도농 모두 감소추세이나, 도시에서는 아직 높음. 1990년대 초반부터 자유화되어 농업정책도 개혁 진행 중임.
 - (농지) 농지 보유권(tenure)의 경우 45%가 미등록상태로 내부분쟁의 원인이 되었음. 토지관련 세금제도는 비누진적이어서 비효율적임. 이원성이 존재하여 대규모 상업농과 노동집약적 소농으로 구분됨.
 - (인프라구조) 도로와 운송망 등 인프라가 다른 남미국가보다 열악하여 고비용이고 경쟁력이 약함.
 - (가격밴드제도) 안데스 가격밴드 제도(Andean Price Band System)*는 1990년대 도입되었는데 OECD Outlook에 따르면 육류 등의 국제가격이 높게 유지되어 추가 관세부과가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미국과의 FTA에서 적용하지 않기로 함.
 - 한편, %PSE는 19%정도로 OECD 평균값에 해당함. 시장가격보조(market price support) 비중은 90%에 이룸. 예산에 의한 보조(budgetary transfer) 비중은 10% 정도이나, 2013년 2배로 증가함. 커피의 경우 생산량에 기초한 보조. SCT(Single Commodity Transfer)의 경우 가금류, 돼지고기, 쌀, 옥수수, 우유, 설탕이 높았으며 이들은 모두 가격밴드 해당품목임.
 - (농업정책) FARC(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 평화협

정에 따라 민간, 학계, 정부가 참여하여 토지·물의 사용, 농업생산성 향상, 인프라 개혁, 거버넌스 개혁 등을 통한 빈곤완화, 성장동력으로서의 농업활성화 달성하고자 함. 토지개혁이 중요 안건임.

- (정책권고) 농업인프라 부족에 따른 GSSE가 낮은 상황이므로, 농업정책 설계·시행 위한 제도적 틀 개혁·강화. 정책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 토지개혁, 농업혁신시스템(AIS) 강화, 공공·민간투자에 대한 장기적·전략적 고려 필요함.
- (콜롬비아, Hernan Miguel Roman 농업부차관) 콜롬비아는 농업분야 잠재성이 높은 국가로 세계 주요 식량 공급원. 토지는 작물 5%, 목초지 33%, 산림 0.1%로 이용됨. 농지는 국토의 40%로, 향후 생산성 향상 기대. OECD 회원국이 되어 각국 경험, 모범관행(best practice) 공유, 토지분쟁 해결, 농업개혁을 통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할 것임.
- (PSE/GSSE) 최근 FTA에서 가격밴드를 제외기로 하는 등 점진적으로 철폐 예정이고, 시장지지 역시 감축될 것임. 커피의 경우 2010-11 생산성의 하락과 국제가격 때문에 생산자에게만 지급된 것임. GSSE는 증가할 것으로, 인프라·관개시설 구축 등 일반서비스에 중점 둘 것임.
- (정책) 2014-18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농업생산성 향상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 시행중으로, 토지구조조정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음. 농업기술지원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수행.
- (혁신) 장기기금조성 및 석유·광산 수익의 10%를 농업혁신에 투자.
- 이에 대한 각 회원국의 발언은 다음과 같음
- (미국) 최근 콜롬비아와 FTA 체결, 오바마 행정부는 콜롬비아의 OECD 가입을 지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는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토지관련 세금수취를 위해서는 토지를 방치하지 않고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인프라의 경우 내륙운송 위한 도로건설이 매우 중요하지만, 채굴, 벌채 등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해결되어야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음.
- 캐나다는 농업부 이외 부처와의 관계, EU는 농촌개발환경, 멕시코는 커피가격제도, 커피가격 하락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질의.
- (콜롬비아) 토지권리(tenure)를 해결한 후 토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세금부과하는 방식을 고려중임. 인프라 투자와 관련, 도로 교통부와 광업·에너지부와 협력중. 막달레나 강 프로젝트가 11월

- PPP 방식으로 시작되었음.
- EU는 우유쿼터 당시 우유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지역은 특별한 (Specialty) 치즈제품이 있었던 경우였는바, 커피의 GI(지리적 표시제)와 지식재산권을, 뉴질랜드는 국경조치로서의 관세와 미래동력과의 관계를, 영국은 소비자를 고려하였는지, 독일은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하여 모니터링과정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
 - (콜롬비아)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시장중심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환경서비스와 온실가스배출량이 많은 목초지의 경우 이런 정책을 통하여 농업, 소비자, 무역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커피는 50만 생산자 중 30만 생산자의 정보밖에 없는 상태로, EU로부터 GI 취득함.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농민의 소득증진 등 해결할 것임.
 - (호주) 호주는 국가차원에서 담당영역·우선순위를 결정하였는바, 젊은 농업인을 유인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 농업투자를 위한 장기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
 - 스위스는 생물종다양성협약 비준여부를 EU는 목초지 활용 위한 혁신안과 위험관리를, 캐나다는 소농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과 평가방법을 질의.
 - (콜롬비아) 콜롬비아에서는 해외민간투자가 많은바, 특히 화훼의 경우 연구개발을 해외민간부문이 수행하고 있음. 농촌개발의 경우 한국 농진청과의 MOU 등 양자협력을 강화. 생물종다양성협약은 국회 절차 진행중이고, 재원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기금 이외에도 광산·자연자원 사용료(royalty)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결국 농업혁신시스템을 통하여 장기적 재원조달 가능할 것임.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등 위험관리제도 구축 중임.

4.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 초청 제안(비공개 세션)

- (사무국) 가입절차 및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콜롬비아는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 모든 회의 초청자로 초대됨
 - 라트비아, 코스타리카, 리투아니아 :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
 - 러시아 : 2015년 상반기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회의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 농정시장작업반회의, 농업무역공동작업반
 -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 농업환경공동작업반
 -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 글로벌농업포럼

5. 2015 의장단 선출(비공개 세션)

- (농업위원회) 의장 - 네덜란드, 부의장 - 스웨덴, 프랑스, 일본, 미국
- (글로벌농업포럼) 의장 - 미국

6. 2016 OECD 농업장관회의 준비

- (사무국) 2016년 1분기 중 OECD 농업장관회의 개최 예정. 2015년 1월 준비단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논의 진행할 것인바 회원국 의견을 요청.
- (스위스, 뉴질랜드) 농업생산성·지속가능성·(2015 UN 의제인)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의제로 제시함.
- (영국) AMIS, 국제농업시장의 기능과 문제점을 의제로 제시.
- (노르웨이) 식품체인(국내/국제/규제측면), 생산성·지속가능성, 식량안보를 의제로 제시.
- (벨기에) 영국, 노르웨이의 제안에 동의하며, GMO, 리스크관리, 기후 변화 등도 추가 제시.
- (독일) AMIS 분석은 지나치게 세부적 내용인바, 원자재 무역에서의 규제 영향 분석, 에너지·경제성장·가격간의 관계 제시.
- (멕시코) PPP(private public partnership) 제시.
- (EU) 장기 시나리오 분석 제시.
- (핀란드) 장기 시나리오 분석, 농업생산성·지속가능성, 식품-사료-섬유(food-feed-fibre), 식품시스템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for food system) 제시.
- (프랑스) 농촌개발, 기후변화, 가격변동성과 식량안보 등 현재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환경적 도전과제를 제시. 국제적 차원의 논의이므로 OECD 비회원국 참여를 확대할 것 제의.
- (한국) 농산물 가격의 변동이 식량안보와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의제로 제시.
- (사무국) 빠른 시일 내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것이며, 농업장관회의 개최 시 글로벌농업포럼의 개최 시기를 조정할 예정임. Delegate's Corner에 해당 항목 추가할 것임.

7. 기타 사항

- CRP 연구결과들을 정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액션플랜이 조만간 마련될 것이고, 2015년 2월중 CRP 중점연구 분야를 안내할 예정.

- OECD Water Horizontal Working Program이 신규로 시작되었으며, 이 작업을 통하여 OECD가 수행하였던 물 관련 거버넌스 등 이슈를 총정리할 예정임.